

노사 줄다리기 재점화… “더 올려야” vs “지불능력 한계”

〈노동계〉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첫 회의부터 노사 극명한 입장차
업종별 차등·제외조항 개선 촉구
노동계 “현실적인 생계비 보장돼야”
경영계 “이미 1만원… 감당 어렵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 제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시스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2.5%, 1.7%로 결정됐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

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시대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 “치솟은 물가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 확대하고 제외 조항 삭제해서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으며,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매출은 줄어 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IMF, 韓 성장률 ‘반토막’ 경고… 美·中·日 대비 큰 폭 하향

기재부, IMF 4월 세계경제전망
GDP 올해 기껏해야 ‘1.0% 증가’
내년에도 2.1% → 1.4%로 하향
정치불안·관세전쟁 역성장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3개월 만에 1.0%포인트(p)나 낮췄다. 이날 미국, 중국,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폭이 작았다.

IMF는 이날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2.0%(1월 제시)에서 1.0%로 대폭 내려 잡았다. 이는 곧 올해 GDP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전년대비 기껏해야 1% 늘거나 1%를 밑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좀 더 악화할 시 이제 역성장(경기 후퇴)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중국과 일본 전망치는 각각 0.5%p, 0.6%p 내렸다. 우리에게 비해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영국·호주(-0.5%p), 캐나다(-0.6%p), 인도(-0.3%p), 브라질(-0.2%p), 유로존 국가들(-0.2%p)에 대한 조정폭도 한국보다 작았다.

다만 관세전쟁을 유발한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2.7%에서 1.8%로 0.9%p 하향 조정했다. 멕시코 경제는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치(1.4%)보다 1.7%p나 낮춰 ‘멕시코 GDP 성장 -0.3%’를 제시했다.

올해 전 세계 GDP는 2024년 대비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전 예측(3.3%)보다 0.5%p 내렸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IMF는 2026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 하향했다. 내년 중국에 대해선 0.5%p, 일본은 0.2%p 내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실제 예고보다 낮추거나,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 경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IMF는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부문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서는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장하준 “美 관세정책 오래 못갈 것… 최대한 지연 작전 써야”

〈케임브리지대 교수〉

국회서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 강연
韓 정부, 국익 고려한 신중한 접근 강조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7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배

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 굴러가는 것이 미국 경제”라며 “싸고 질 좋은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1~2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착한 나라가 공장 지어주고 기술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40년 동안 파괴했다. 생산시설을 다 옮겨서 투자 안한 걸 어떻게 2~3년 안에 되돌리나.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해도 2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의 재건을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1~2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을 하려면 질 좋은 부품 기업이 있어야 하

고,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협동 체계, 산학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만 공장 지어서 이것들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를 포기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위한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ELS 손실에 파생시장 10년 만에 최저

H지수 급락에 2.4조 손실
“연간 손익 마이너스 처음”

지난해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면서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ELS 투자 손익이 손실을 기록한 것은 금융감독원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3000억원 줄었다. 상환액은 82조7000억원으로 발행액보다 9조1000억원 많았다. 이에 따라 발행 잔액은 81조6000억원으로 감소하며 2014년(84조1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

록했다.

특히 ELS 발행액은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감소했다.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인한 수익구조 손상과 일부 시중은행의 판매 중단이 수요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H지수 기초 ELS의 만기 도래가 집중되면서 전체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연간 손익이 마이너스로 기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LS의 구조도 변화했다. 원금지급형 ELS 비중은 전년 51.2%에서 지난해 70.9%로 증가한 반면, 원금비보장형 비중은 29.1%로 줄었다. 기초자산 구성도 종목형 ELS가 57.3%로 비중이 확대되고, 지수형 ELS는 35.5%로 감소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